

대학 사회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 - 대학생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초록

- ▶ 본 연구는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 피해 경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대학 내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근거를 제시함.
- ▶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라 위협 체감·대응 방식·법적 이해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남. 또한 피해 지원 기관과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 효과는 전반적으로 낮아, 현행 대학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의 실효성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내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강화, 인권센터 역할 확대,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 대학 인권센터를 초동 대응의 핵심 축으로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 대학생 폭력 예방교육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를 위한 학내 규정 마련 및 개선, ▲ 온라인 플랫폼 책임성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도출함.

* 이 이슈페이퍼는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조혜승·김효정·송치선(2025). 대학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켰으며, 특히 학교 내에서도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부재함.
- ▶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20대 연령층에서 집중되고 있음. 이는 대학생 연령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주요 피해집단임을 시사하며, 대학 내 실질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줌.
- ▶ 이에 본 연구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대학생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인식 및 피해 경험, 주변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대학생(2024년 기준 2,356,553명)이며, 표본은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총 1,500명(남 750명, 여 750명)으로 구성됨. 조사는 웹 기반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주요 조사 내용은 SNS 및 스마트폰 사용 실태, 딥페이크 인식 및 경험 피해 대응 및 예방 행동, 교육 경험 및 정책 수요 등으로 구성됨.
-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인식 수준과 예방 교육 경험 정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 주요 결과

○ 대학생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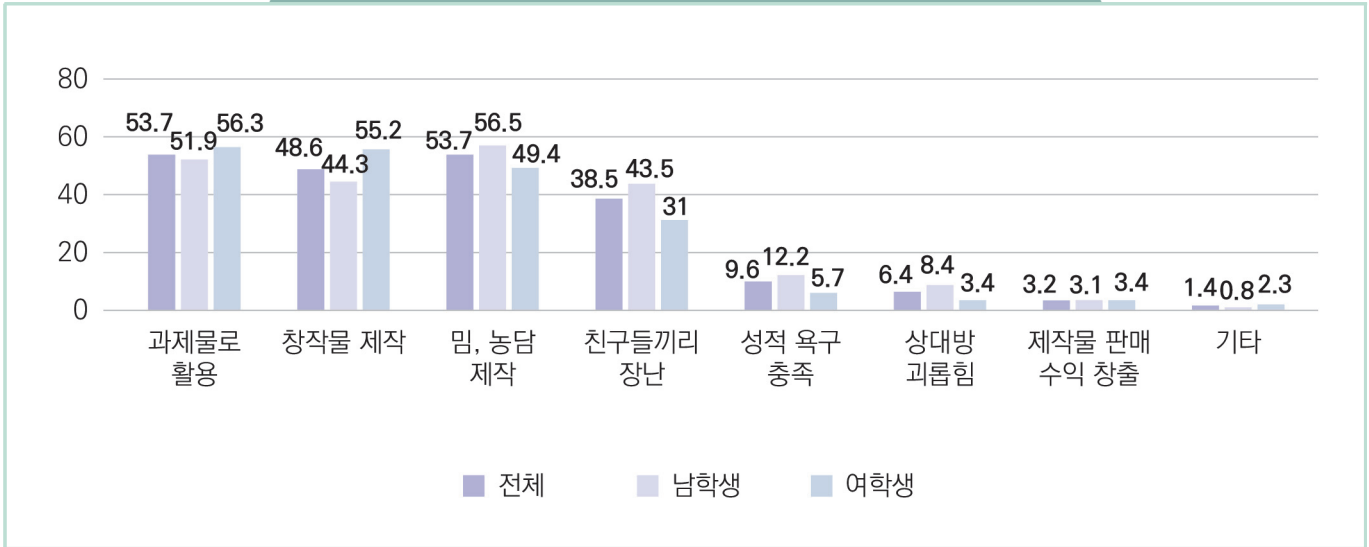
- ▶ 대학생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인스타그램(81.1%), 유튜브(71.2%), 카카오톡(70.3%)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X(트위터), 디스코드,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중심 플랫폼도 일부 사용하고 있음.
- ▶ 특히 대학 내부 정보 공유와 의견 개진 기능을 가진 '에브리타임 등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주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지목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1%로 비교적 높음.

○ 딥페이크 사진·영상 제작 경험 및 이유

- ▶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경험과 관련 기술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결과, 전체 응답자의 14.5%가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제작 경험은 남학생(17.5%)이 여학생(11.6%)보다 높음.
- ▶ 주된 제작 목적(1+2+3위 중복응답)은 '과제물의 일환으로 활용'(53.7%)과 '재미·밈 생성'(53.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창작물 제작'(48.6%), '친구들과 장난'(38.5%) 순으로 나타났으나 적지 않은 응답자들은 '성적 욕구 충족'(남 12.2%, 여 5.7%)이나 '상대방 괴롭힘 목적'(남 8.4%, 여 3.4%)을 선택하였으며, 특히 남학생 응답 비율이 여학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딥페이크 사진·동영상 제작 이유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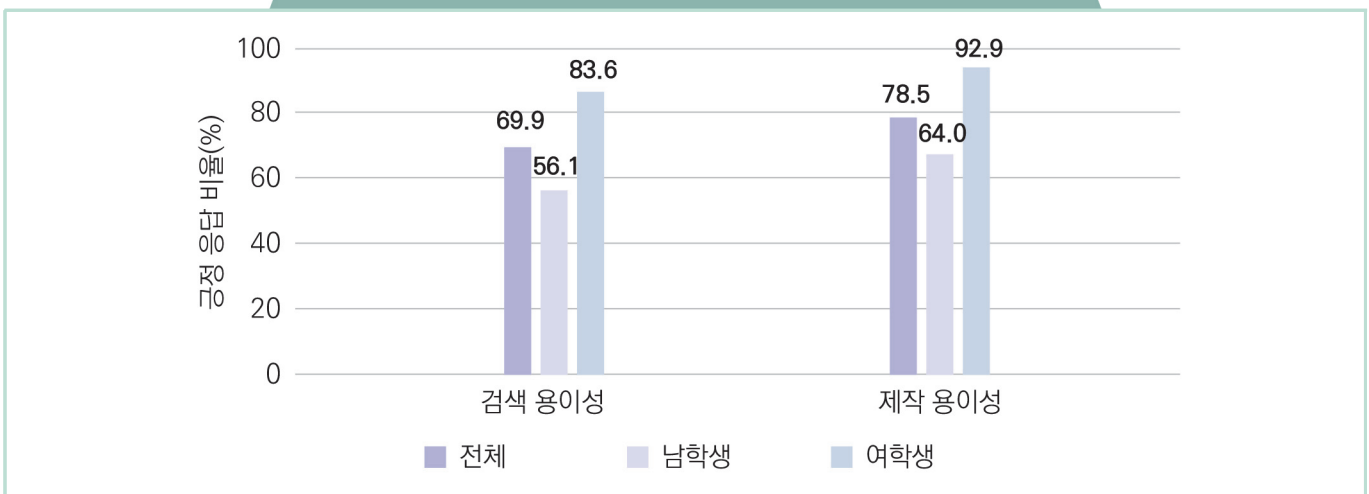
주: 응답자 중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제작한 응답자 대상

○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검색 및 제작 용이성

- ▶ 대학생들은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성적 허위영상물)의 온라인 접근성과 제작 용이성이 모두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검색 용이성에 대해 전체의 69.9%가 '매우 그렇다(20.7%)'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49.2%)'고 응답하였고, 제작 용이성에 대해서는 78.5%가 '매우 그렇다(31.3%)'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47.1%)'로 응답함. 이는 대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의 존재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딥페이크 제작과 접근이 현실적으로 매우 쉬운 행위라는 점을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함.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의 검색·제작 용이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해당 문항에 '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합계 비율

- ▶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검색 및 제작 용이성에 대해 성별 인식 차이가 나타남. 검색 용이성에 대한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3.12점, 남학생은 2.54점으로, 여학생이 0.58점 더 높았음. 제작 용이성 역시 여학생 3.40점, 남학생 2.69점으로 0.71점의 격차가 있었으며,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은 여학생 48.7%, 남학생 14.0%로 약 3.5배 차이를 보였음.
- ▶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딥페이크 기술 사용 경험이 실제로 많아서라기 보다, 딥페이크가 언제든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남학생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가능한 도구' 혹은 '유쾌적 실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피해 위험을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젠더 인식의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남.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인지도

-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와 감정적 반응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 중 62.5%가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도 34.7%로 집계되어, 97.2%가 어느 정도 이상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여학생(72.1%)은 남학생(52.9%)보다 인지율이 19.2%p 높았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4.5%, 여학생은 1.1%로 인지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특성상, 여학생들이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정보 민감도를 더 강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인지 후 감정

-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6.4%는 '분노와 충격을 느꼈다', 20.9%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응답해, 약 67.3%가 강한 부정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여학생의 경우 '분노·충격'(56.3%)과 '불안·두려움'(31.4%) 응답 비율이 높아 총 87.7%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반면, 남학생은 '분노·충격' 36.2%, '불안·두려움' 9.9%로 총 46.1%에 그침. 또한 '놀랍지만 직접적 영향은 없었다'는 남학생 응답률은 42.7%로, 여학생(11.2%)의 세 배 이상임.

○ 대학 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이유에 대한 인식

- ▶ 딥페이크 성범죄의 제작·유포 동기에 대한 인식 결과, 대학생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성적 욕구뿐 아니라 낮은 처벌 수위, 장난, 악의적 괴롭힘 등 복합적 동기로 보고 있음.
- ▶ 전체 응답자 중 48.9%가 '성적 욕구 충족'을 주된 이유로 인식했으며, '장난'(30.5%), '들키지 않을 것 같아서'(29.5%), '처벌이 약해서'(29.1%),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25.3%) 등이 주요 응답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성적 욕구'(54.0%), '장난'(34.4%) 응답률이 높았고, 여학생은 '처벌이 약함'(42.7%), '들키지 않을 것 같음'(30.0%) 등으로 응답하여 남학생은 가해자 중심의 인식, 여학생은 피해자 중심의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책임에 대한 인식

- ▶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의 책임 소재에 대해 응답자의 85.2%는 '도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으며, '약한 처벌'(63.1%), '플랫폼 책임'(16.0%), '장난으로 여기는 문화'(10.3%) 등도 지목됨.
- ▶ 여학생은 '도용자'(88.4%)와 '약한 처벌'(74.7%)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플랫폼 책임'(22.5%)이나 '피해자의 사진 관리 책임'(13.6%)을 더 강조함.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의 사진 관리 책임'을 선택한 비율에서 남학생(13.6%)이 여학생(4.9%)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부분임. 이는 일부 남학생이 여전히 피해자의 부주의를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 즉 '피해자 책임 전가' 인식이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인식 수준

-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적 인식에 있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편집·합성 행위에 대한 처벌 인지율은 전체 58.1%로 확인되었으며, '전혀 몰랐다'는 응답도 7.9%에 달함. 여학생은 62.4%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남학생은 53.9%에 그쳤고, '전혀 몰랐다'는 응답도 남학생 10.5%, 여학생 5.2%로 약 2배 차이가 나타남.
- ▶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성적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인지율은 전체 51.4%로, 제작 관련 인지도보다 낮음. 여학생의 인지율은 57.5%, 남학생은 45.3%였으며, '전혀 몰랐다'는 남학생 비율(14.3%)은 여학생(8.3%)의 약 1.7배임.

○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경험

- ▶ 전체 응답자의 35.0%는 대학 내에서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례를 실제로 '접한 적 있다'고 답해, 단지 가능성 인식을 넘어 실제 사건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줌.
- ▶ 가장 많이 인지된 사례는 '성적합성물 제작'(23.0%)에 이어 '시청·소지'(15.6%), '유포·협박'(14.1%)임.
- ▶ 여학생의 관련 사건 인지 경험 비율은 42.5%로 남학생(27.5%)보다 15%p 이상 높았으며, 개별 사례별로도 여학생은 제작(31.6%), 유포(16.7%), 시청(22.1%)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사건 인지율을 보임.

○ 대학 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피해 경험 및 대응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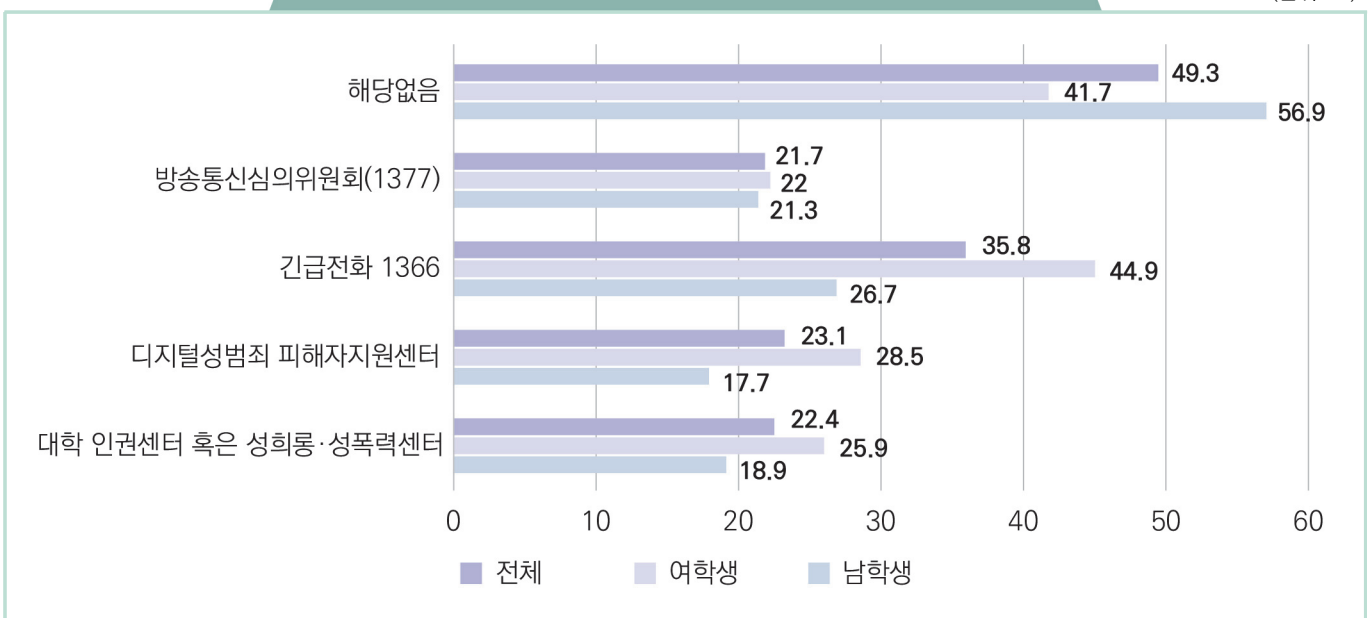
- ▶ 실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9%로, 대학생 약 15명 중 1명꼴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학생(7.7%)이 여학생(6.1%)보다 소폭 높았음.
- ▶ 피해자(104명)의 대응 방식으로는 '학내 기관에 도움 요청'(38.5%), '경찰 등 수사기관 신고'(31.7%), '학생 자치기구 도움 요청'(26.0%),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22.1%)이 주요 경로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피해자는 8.7%에 달함.
- ▶ 무대응 이유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불안하거나 위축된 상태여서'(22.2%),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11.1%) 등이 뒤를 이음.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75.0%가 '대응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반면, 여학생은 '심리적 위축'(40.0%)과 '낮은 해결 기대감'(20.0%) 등의 이유를 고르게 제시함.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기관 인지도

-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음. 긴급전화 1366만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5.8%로 비교적 높았으며, 대학 인권센터(2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21.7%)에 대한 인지도는 모두 30% 이하에 머물렀음. 전체 응답자의 49.3%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해 절반 가까이가 관련 기관을 인식하지 못함. 여학생의 기관 인지도는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기관 인지도

(단위: %)



주: 1) 각 해당 기관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해당없음'은 어느 곳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지 않은 비율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률은 전체의 65.2%였으며, 온라인 교육 방식이 85.5%로 대부분을 차지함. 대면 교육은 21.9%, 문화 캠페인 참여는 14.7%를 차지함. 실효성 인식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2.1%,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33.3%로 양분되었으며, 전체 평균 평점은 2.94점(5점 만점)으로 낮은 편임.
- ▶ 향후 폭력예방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법적 기준 및 처벌 규정 및 실제 판례 소개’(54.0%)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이어 ‘피해 발생 및 목격 시 대응 절차와 신고 방법’(44.0%), ‘피해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기관 안내’(26.6%) 등이 뒤를 이음. 여학생은 실질적 대응 정보(법률, 대처 절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남학생은 개념 이해 중심의 접근을 더 선호함.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개선방안

-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학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가해자 징계 기준 강화’(55.3%)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고, ‘커뮤니티 모니터링’(41.7%), ‘인권센터 역할 강화’(36.2%)도 중요하게 인식됨. 여학생은 징계 강화 요구가 특히 강했고(68.0%), 남학생은 예방 교육이나 환경 조성(27.9%)을 상대적으로 중시함. 특히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내 보호조치 마련’(40.8%)과 ‘외부기관과의 연계’(44.9%)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나타남.
- ▶ 사회적 차원에서는 ‘법률 정비 및 형사처벌 기준 강화’(49.9%),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31.5%), ‘기술적 대응책 마련’(30.7%)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특히 여학생은 ‘법적 조치 강화(62.1%)’에 대한 요구를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

3 정책제언

○ 대학 인권센터의 초동 대응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 ▶ 대학 인권센터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초동 지원기관으로서 신뢰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학내 구성원이 인권센터의 존재·역할·지원 범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홍보와 예방교육 연계 안내가 요구됨.
- ▶ 피해 발생 시 인권센터가 적절한 상담·지원·외부 연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학내 보호조치·생활지원 등 후속 지원을 위해 인권센터와 학생처 등 관련 부서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함.
- ▶ 무엇보다 이러한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전담 인력 확충, 고용 안정성 보장, 예산 확대 등 구조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딥페이크 제작 기술 접근성과 성범죄 인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함.
- ▶ 현재 대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는 매우 부족함. 초·중·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대학 특화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예방교육 체계 구축이 시급함.
- ▶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학년별 인식 격차는 예방교육 설계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남학생의 유희적·방관적 태도 개선과 여학생의 피해 불안 완화가 모두 반영된 성인지 기반 차별화 교육 모델이 필요함.
- ▶ 나아가 대학 폭력예방교육은 피해자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가해·방조·목격자 모두를 포함하는 공동체적 책임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참여형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 인식과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를 위한 학내 규정 마련 및 개선

- ▶ 학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휴학·수강신청 조정·공간 분리 등 생활·학업상의 행정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전담인력 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학내 규정(학칙 등)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 가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학칙 내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포함) 관련 징계 기준 및 중징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입시 단계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입학 제재 또는 입학 취소 조항을 대학 전형요강 및 자체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대학 인권센터와 외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 대학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초기 상담과 사건 접수를 담당하지만, 의료·법률·수사·심리 지원 등 실질적 보호 자원은 제한적이므로, 외부 전문기관과의 공식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 2024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앙 및 지역의 디성센터와 각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인권센터도 이러한 원스톱 지원체계에 포함되어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책임성 및 모니터링 강화**
 -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 ▶ 현행 법령은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되어 있어, 에브리타임 등 폐쇄형 플랫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폐쇄형 커뮤니티(에브리타임 등)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물 경고창 게재, 삭제 요청 기능 등 최소한의 관리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폐쇄형 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 확대가 필요함.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적 대응책 마련**
 - ▶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 이후 회수와 삭제가 극히 어려운 특성상, 피해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임.
 - ▶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삭제 중심의 기술적 대응에서 나아가 탐지와 예방 중심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대학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속적 연구 수행**
 - ▶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실태조사는 단편적인 수준임. 특히 다수의 대학은 예산부족으로 학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 따라서 대학 수준의 성희롱·성폭력 및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학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성소수자,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취약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표본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이러한 실태조사는 대학이 근거 기반의 폭력예방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아울러 대학 내 딥페이크 사건의 실제 처리과정, 2차 피해 양상, 기존 지원 시스템의 한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됨.

주관부처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관계부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